

한국가톨릭교회 생명운동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국 생명대회'가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각 교구에서 모인 신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서 열렸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확인하고 생명수호를 다짐하는 모임으로는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다채로운 일정을 통해서 참석자들은 인간 생명이 왜 소중한지,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죽음의 문화'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참석자들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 이번 생명대회에서는 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가 <생명운동 지침서(안)>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한국가톨릭교회 생명운동이 지향해야 할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년 가을 주교회의에서 이 지침서(안)이 채택되면 이제까지의 우리 교회생명운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톨릭교회의 생명운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간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임을 알리고 반생명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반생명적 현상들에 대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해 가는 일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간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법이나 사회제도 그리고 문화가 오히려 이들을 위협하거나 그런 위협적인 행위들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려 할 때 이를 적극 반대하고 바로 잡기위해 노력하는 일도 포함 한다. 최근, 사실상 모든 낙태를 합법화 하려는 일부 의사들과 여성운동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개정작업에 들어간 모자보건법이나, 초기



맹광호 이시도로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 운영위원

인간생명체인 배아를 인간생명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대해 교회가 강력하게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생명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부터다. 그것은 인간생명에 대한 위협이 이 시기에 나타난 인구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시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의학 관련기술은 출산억제를 위한 인공적 피임이나 낙태의 성행을 초래했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생명과학분야 기술 개발 노력은 사회적 유용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초기 생명체나 약자들의 인권을 크게 훼손해 왔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가톨릭교회 생명운동도 이런 사회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한국가톨릭교회의 생명운동은 1961년 5.16 군사혁명이후 수립된 제3공화국에서의 강력한 인구정책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반생명적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7년 7월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에서 펴낸 <생명에 관한 천주교회의 입장>이라는 책자를 보면 1960년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이름으로 발표한 생명 관련 담화문이 100개가 넘는다. 그 만큼 교회가 생명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는 증거다. 이 중에는 환경문제나 사형 제도를 포함한 인권문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표명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역시 한국 사회 전반에 일상화 되어 온 반생명적인 인공적 피임이나 낙태, 그리고 최근에 생명과학분야 연구와 기술 개발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아 파괴행위 같은 '죽음의 문화' 현상이 확대되어 가는 것에 대한 교회의 우려와 걱정을 표명한 것들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울대교구가 '생명위원회'를 발족하고 최근 정부까지 나서 인간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를 부추기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대안적 연구로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이를 계기로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분야의 교육과 연구 학술활동 등을 시작한 것은 한국가톨릭교회 생명운동의 큰 발전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교회의 관심과 노력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죽음의 문화'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성과를 이루어 냈느냐 하는 점이다. 강력한 성명을 통해서 정부의 반생명적인 인구정책이나 보건의료 정책, 그리고 역시 반생명적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교회의 우려와 반대의 뜻을 전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이런 계획이나 정책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이에 저항하도록 하는데도 그 동안 교회의 노력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더구나, 교회의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톨릭신자들의 인식이나 태도 그리고 실천 양상이 비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추진해 온 생명운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내용과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

2004년 12월,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일반인들의 경우 수정란을 생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0.0%인데 비해 가톨릭 신자들은 69.7%이고 인공적 피임이 반생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일반인이 28.6%인데 비해 가톨릭신자들은 35.8%로 신자들이 다소 높기는 하나 생각보다 큰 차이라고 할 수 없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의 94.5%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보다는 다소 낮기는 하지만 가톨릭신자들도 87.6%가 이 질문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실제 낙태를 경험한 경우도 일반인 여성이 40.1%인데 비해 신자 부인들은 34.2%로 약간씩 낮을 뿐이었다. 한편, 기구나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주기를 이용해서 피임을 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반 여성이 15.2%, 신자 여성부부들이 14.6%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산을 조절하는 부부비율이 오히려 신자들에서 더 낮았다.

이런 현실은 향후 교회 생명운동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것은 우선 교회 생명운동이 단지 반생명적 사회현상들에 대해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생명

운동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생명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도와주는 실천적 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

다행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에 생명관련 기구가 신설 또는 확대 개편됨으로써 교회 생명운동이 새로운 차원을 맞고 있으며 가톨릭대학교에 생명대학원이 개설됨으로써 이 분야 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서게 된 셈이다. 이제부터는 이들 기구의 전문성과 조직의 체계화를 통해 교회 생명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 생명운동의 신학적, 사목적 배경을 좀 더 정확하게 신자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가령 교회에서 운영하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올바른 생명관을 위한 생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생명운동의 성격에 맞는 현장 활동들, 예컨대 자연적 출산조절방법이나 성교육의 보급, 그리고 불임부부와 미혼모들을 도와주는 시설 및 호스피스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명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자나 일반인들을 직접 도와주는 활동으로 교회 생명운동이 새롭게 조직되고 추진되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음성 꽃동네에서 개최된 대규모 생명대회와 이를 계기로 제안된 <생명운동 지침서(안)>은 우리나라에서의 교회 생명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침서는 우선 서문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와 그 불가침성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재천명하며, 동시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개개인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할 것을 절박하게 호소하고자(생명의 복음, 2항) 이 지침서를 발표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침서는 이제부터 모든 신자들이 생명수호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침서는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생명적 행위들, 예컨대 낙태나 자살, 안락사, 사형 등은 물론 무분별한 인공피임과 태아진단, 체외

수정, 그리고 인간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와 잘못된 사망시간의 판단 행위 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나서 어떻게 생명수호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회는 아주 구체적으로 신자들에게 생명수호를 위한 ‘기도와 전례’는 물론 교회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생명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계속해서 낙태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나 낙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혼모 등을 돕는 ‘사목적 배려와 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입법 활동에 관여하는 정부나 국회 내의 가톨릭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신자들도 반생명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반대하는 한편 생명수호를 위한 ‘법률과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동시에 이 지침서는 교회의 생명운동이 일부 성직자, 수도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본당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각 ‘교구생명위원회’가 ‘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와 함께 전 방위적으로 생명운동을 전개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교회 내 생명관련 단체들, 예컨대 교육, 의료기관은 물론 한국턴스타나 한국행복한가정운동, 그리고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자살예방센터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과 연계해서 좀 더 활발한 생명수호 활동과 생명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회 생명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강조해야 할 일은 가톨릭의료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서 보듯이 인간생명이 시작되는 출생에서부터 생명이 끝나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생명관련 활동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명에 관한 교회의 모든 문헌이 이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1995년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가 펴낸 <의료인 현장>은 인간의 출생과 사망 전 과정에 관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인간생명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 현장의 서론은 가톨릭의료인과 의료기관이야말로 ‘죽음의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신뢰하고 기대하는 ‘생명의 봉사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